

**별 첨**

**규제비용관리제 성과보고서**

---

# **규제비용관리제 성과보고서**

**(‘16.7~’17.1)**

---

2017. 3. 24

**국무조정실**

#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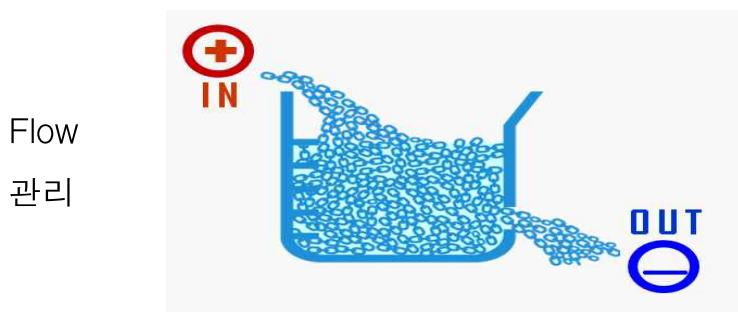
I.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	1
II.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 .....	4
1. 부처별 IN-OUT 현황 .....	4
2. Cost In-Out 주요 사례 .....	6
3. 주요 성과 .....	13
III. 향후계획 .....	18

# 1. 규제비용관리제 개요

## 1. 의 의

- (의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해당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제도

<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정비(Cost-In, Cost-Out) >



- 단순 규제 수 증감관리만을 목표로 도입한 규제총량제 운영경험('04~'06년)을 토대로 객관적·과학적 방식으로 계산된 규제비용을 관리기준으로 설정
  - \* 규제비용을 기준으로 신설·강화와 기존규제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 한국식 규제비용관리제를 'Cost-In, Cost-Out'으로 명명(CICO)
- (도입목적) 규제 신설·강화시 피규제자에게 가급적 부담이 적은 규제 대안을 발굴토록 유도하는 한편, 상시적인 규제 폐지·완화 동기 부여

### <해 외 사례>

- (영국) 신설·강화규제가 기업 및 사회단체에 순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존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순비용을 상쇄시키도록 하는 "One-In, One-Out" 제도를 도입('06년), '13년부터는 이를 강화한 "One-In, Two-out" 방식으로 대체
- (호주) 규제의 총량(Stock)을 관리하는 기제로서 규제상쇄제도(Offset Rule) 운영

## 2. 도입경과

- VIP 신년 기자회견,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발표('14.1.6)
  - \*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여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
- 규제비용관리제 도입계획 및 방안 보고('14.2~3)
  - \* '14.2.5 국조실 업무보고, '14.3.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규제연구센터(KDI·행정연, '14.6) 및 규제위 산하 비용전문위원회 설치('14.8~)
-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실시('14.7~'16.7)
  - \* ('14.7) 8개 부처→ ('15.4) 15개 부처→ ('16.3~7) 22개 부처
- 규제비용관리제 전면실시(총리훈령, 16.7.19)

## 3. 적용대상

- (대상규제)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 등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
- (대상기관) 27개 중앙행정기관(규제개혁 평가대상 기관)

구분	부처
대상기관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안전처, 인사처, 보훈처,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비대상기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원안위, 법제처, 조달청, 새만금청, 행복청, 권익위, 기상청, 국세청, 농진청, 병무청, 통계청, 방사청

\* 등록규제수 30개 미만 기관 및 외교·안보 등 특수성 고려 15개 기관 제외

- (적용제외)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등은 비용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시킴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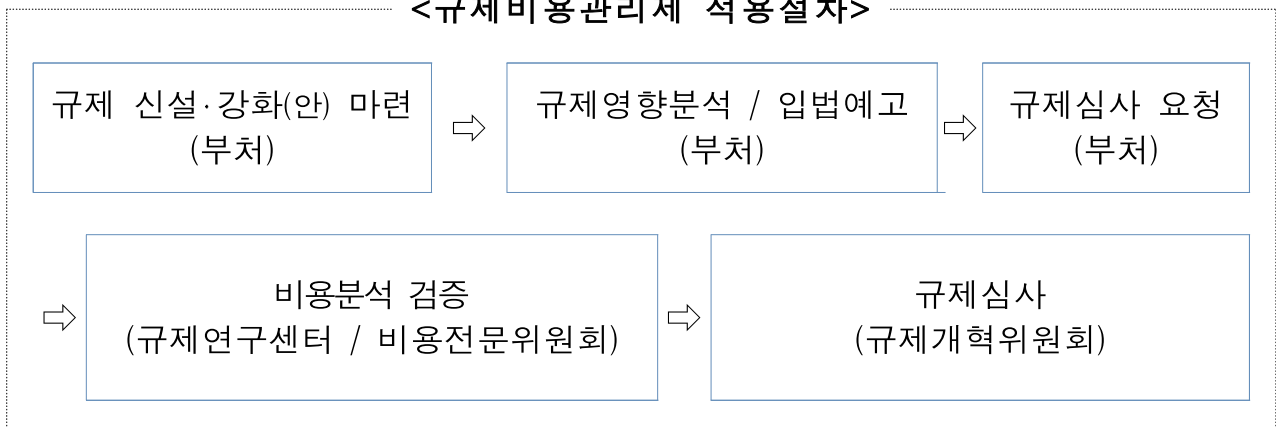
###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 >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이 설정된 규제

## 4. 적용방법

### □ 적용절차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 □ 적용방법

- 신설·강화규제 심사 요청 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 제출
-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정비계획(원칙 1년 이내) 제출
-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적립(Banking) 관리

## II.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

### 1. 부처별 IN-OUT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가 -3,7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1,470억 원, 산림청 -141억 원 순으로 규제비용 감축
- 업무특성상 다수의 규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에서 규제비용을 축적

(단위 : 건, 백 만원)

순위	부처명	Cost-In		Cost-Out		순비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17,054	34	-575,720	-558,666
1	농림축산 식품부	0	0	2	-374,989	-374,989
2	국토교통부	3	644	5	-147,668	-147,024
3	산림청	0	0	2	-14,189	-14,189
4	여성가족부	0	0	1	-9,793	-9,793
5	산업통상 자원부	3	1	3	-9,079	-9,078
6	미래창조 과학부	2	3,501	3	-6,973	-3,472
7	중소기업청	2	1,191	1	-4,432	-3,241

순위	부처명	Cost-In		Cost-Out		순비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특허청	0	0	4	-1,886	-1,886
9	방송통신 위원회	0	0	3	-1,229	-1,229
10	식품의약품 안전처	1	168	1	-866	-698
11	환경부	2	85	2	-344	-259
12	공정거래 위원회	0	0	2	-138	-138
13	기획재정부	1	0	3	-121	-121
14	국가보훈처	2	4	0	0	4
15	보건복지부	13	3426	1	-3267	159
16	교육부	1	68	0	0	68
17	문화체육 관광부	2	823	0	0	823
18	금융위원회	12	2,246	0	0	2,246
19	국민안전처	1	4,897	1	-746	4,151

※ 고용노동부,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법무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8개 기관은 비용관리제 적용 규제가 없어 제외

## 2. IN-OUT 주요 사례

### 가. Cost-In 주요 사례

#### ① 재난취약시설 소유자 등의 재난보험 가입 의무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시행령)

##### 규제 내용

-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의 재난보험 가입 의무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 가입금액에 대한 규정 신설
  - 가입대상 : 주유소, 지하상가, 물류창고 등을 비롯한 15종의 시설
  - 보상금액 : ① 사망 및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 이상  
②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10억 이상

##### 기대효과

연간 49억 원 비용 증가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 한도액을 제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방지

#### ②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규제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내용\* 규정

\* 형사고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행동요령 교육 등

##### 기대효과

연간 9억 원 비용 증가

- 금융회사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고객응대업무의 건전성 제고



###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규정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규제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총자산 대비 채권액 비율 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정함

#### 기대효과 연간 2억 원 비용 증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출을 통한 수익 확대 대신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경영 내실화 도모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 금융업

### ④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규제 내용

- 사업내용이 유사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격차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

\* 방송통신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정분담금

-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 매출 100억 원~200억 원(2.3%→2.0%)  
매출 200억 원 초과(2.8%→2.3%)

- IPTV 사업자 : 모든 사업자(0.5%→1.0%)

#### 기대효과 연간 35억 원 비용 증가

- 방송사업자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수율 조정으로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 5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추가 고용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 규제 내용

-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업무를 수탁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기존 도매업무관리자 이외 1명 이상의 도매업무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규정

\* 업무를 위탁하는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기대효과

연간 25억 원 비용 증가

- 수탁도매상의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보장

## 6 사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및 결과조치

(교육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 규제 내용

-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에 대한 이행사항 확인결과, 승인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대해 사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의무 규정

\* 사업개요,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영향평가 결과, 조치계획 등 포함

\*\* 교육감의 명령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

### 기대효과

연간 0.7억 원 비용 증가

- 교육환경평가 이후 환경상 변화가 초래된 경우 등 당초 승인내용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환경보호의 지속성 확보

## 나. Cost-Out 주요 사례

###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등록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개선 내용

-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시 '내수판매 계획량의 저장시설 의무 용량'을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

#### 개선 효과 연간 87억 원 비용 감소

-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경감시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민간참여 확대 도모
-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면서 가격안정 기대\*

\* 국내 LPG 수입시장은 2개 대형 수입사(SK, E1)가 96%를 점유한 과점시장으로 과거 가격담합을 통해 소비자 피해 유발

\*\* 일본은 18개의 LPG 수입사가 경쟁중으로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

### ②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차단 성능기준 신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제 내용

-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고, 세대별 급수소음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감압밸브 설치

\* 화장실 내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 천장'에 설치하는 방식(↔층상배관 : '위층 바닥')

#### 개선 효과 연간 2억 원 비용 감소

- 개정안에 따른 신규 공법 적용시 시공비용 감소 예상

\* 비용절감효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공법을 유지하는 기업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신규 공법이 업계에 일반화된 상태

- 화장실 소음기준을 주택건설 기준에 도입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간 불필요한 분쟁 방지

### ③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무 폐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 개선 내용

○ 3천호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되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의무 폐지

\* 동법 제11조에서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낮은 상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개선 효과 연간 98억 원 비용 감소

○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이라는 법령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규제 완화

### ④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용허가 기준완화

(산림청,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 규정)

#### 개선 내용

○ 산림청이 보유한 경제림육성단지 내에서는 풍력발전 적합지임에도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목재생산 및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인공조림지 등 제외
-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

#### 개선 효과 연간 120억 원 편익 증가

○ 풍력발전시설 설립 업체의 신규 수익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

## ⑤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 개선 내용

- 「건축법」상 공장이 아니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인 소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 신축·증축·이전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자원순환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한함

### 개선 효과

연간 44억 원 비용 감소

- 부담금 감소로 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 기대

## ⑥ 무선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산일 관련 규제완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시행령)

### 개선 내용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무선국의 설치장소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음번 정기검사를 미리 받아 변경검사에 같음하도록 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산일을 재산정

\* 설치장소 변경, 장치의 기기대치로 인해 정기검사에 준하는 변경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 개선 효과

연간 46억 원 비용 감소

- 무선국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법한 운용을 위한 허가·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정기검사에 준하는 변경검사시 소요되는 검사 수수료 및 검사 대응을 위한 행정비용 경감 기대

## 7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물류단지 개발지침)

### 규제 내용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시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량 규모를 결정하였으나, 물류시설법이 정한 상한(25%)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의 용적률 증가에 비례하여 결정하도록 기준 제시

\* 공공기여 : 개발이익의 환수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에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 공공기여량 = 부지전체 토지가액 × 공공기여율

$$\text{공공기여율(\%)} = \frac{(\text{계획용적률}-100\%) \times 28.57}{\text{계획용적률}}$$

### 기대효과

연간 902억 원 비용 감소

○ 공공기여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 물류시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 8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선 내용

○ 수도권과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판장 설치 허용

### 개선 효과

연간 524억 원 편익 증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판로 제공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판장 설치에 따른 순수익(매출액-설치비용)을 편익으로 산정



### 3. 주요 성과

#### 가. 비용관리제를 통한 규제부담 완화

◆ '16.7.19~'17.1.18 기간 중, 총 5,586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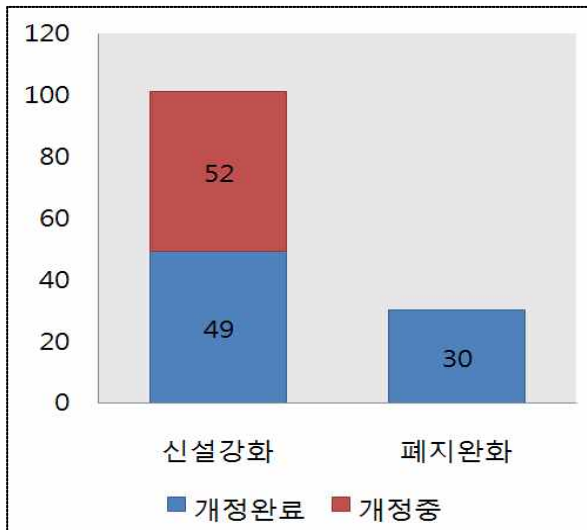
- ▶ Cost-In 규제(45건)로 총 171억 원의 규제순비용 증가
- ▶ Cost-Out 규제(34건)로 총 5,757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 동 기간 중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규제는 신설·강화 49건\*, 폐지·완화 30건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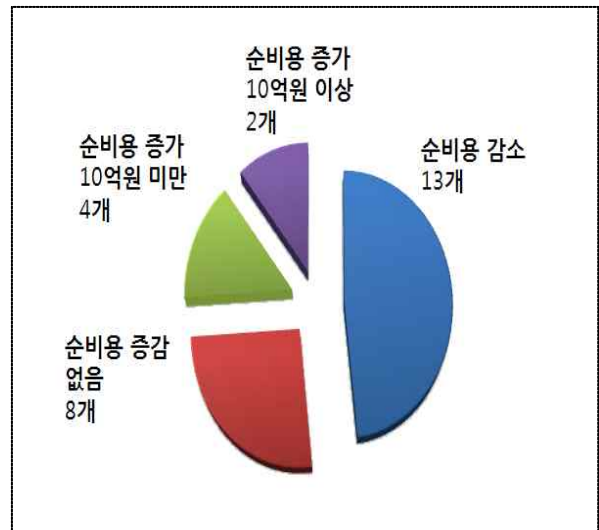
\* 신설·강화 규제를 통한 Cost-Out 사례 4건 포함(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 27개 대상기관 중 13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했으며, 규제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6개, 증감 변동이 없는 기관이 8개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규제>



<순비용 증감 분포>



○ 100억 원 이상 규제순비용 감축기관이 3개, 10억 원 이상 규제순비용 증가기관이 2개임.

□ 규제 신설·강화시 폐지·완화 규제의 동시 제출 부담 완화\* 등 탄력적 운영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 동시 제출이 곤란한 경우 1년 내 정비계획 작성·제출

## 나. 과학적·체계적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반 마련

- ◆ **비용편익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위해 각 기관들은 부처내 교육실시, 비용분석TF 운영, 비용분석 연구용역 등 확대
  - ▶ 과학적·합리적 분석을 통해 SMART Regulation 도입 유도 (SMART :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levant, Time-Bound)

### 고용노동부

- 규제비용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산업안전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규제비용·편익분석 자문단(15명)」 구성·운영

### 국토교통부

- 외부전문기관\*의 비용분석 검증 및 지원으로 규제비용분석의 객관성 확보
  - \* 1차관실은 국토연구원, 2차관실은 교통연구원이 각각 규제비용분석 검증 및 지원

### 금융위원회

- 금융규제 특성에 맞는 매뉴얼 마련(KIPA 연구용역)
  - 금융위 전체 소관 법률을 유형화한 후 이를 기초로 비용편익 측정에 필요한 지표를 수집, 유형별 적합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방법 제시
- 부내 실무담당자 대상 규제비용편익분석 교육 실시(KIPA)

### 기획재정부

- 조세재정연구원을 규제비용분석 지원기관으로 선정, 규제담당부서의 비용편익분석 업무 지원 및 자문 수행
- 부내 실무담당자 대상 규제비용편익분석 교육 실시(KDI)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규제영향평가팀\*을 구성·운영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내 설치(박사급2명, 석사급3명)



## 미래창조과학부

- 규제비용분석TF 운영 등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부 심사체계 구축
  - KISTEP, KISDI를 규제비용편익분석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 부내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작성·배포 및 직원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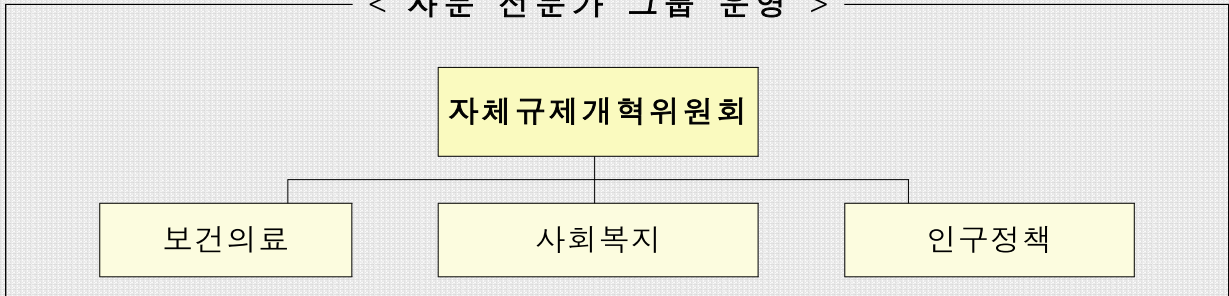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전문가·학계·KDI 등으로 구성된 규제비용분석TF\* 운영
  - \* 학계(3), 연구계(2), 연구용역기관(4), 규제담당 공무원(1)로 구성, 6회 워크숍 실시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KISDI 등 방송통신 연구기관과 공동 검토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등 분야별로 관련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전문가그룹 운영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자문 실시

< 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연구기관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 외부전문기관과 용역 체결\*을 통해 규제비용편익분석 실시
  - \* (기간) '16.5월~11월 / (기관) 산업연구원 / (용역비) 25백만원
- 신설강화 12건, 폐지완화 7건 등 19건의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실시

## 산림청

- 2016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용역 실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림분야 규제비용분석TF팀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체규제심사 대상에 폐지·완화 규제의 비용분석 적정성 심의 포함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외부위원에 비용분석 전문가 추가 위촉

## 여성가족부

- 규제비용분석TF 간담회 실시('16.2.4)
  - 규제비용관리제 전면실시에 대비, 직원 및 유관기관 규제담당자로 구성된 **비용분석TF** 설치

### <유관기관 비용분석TF>

분 과	구 성		각(소관) 실국
	내부 직원(4인)	외부 위원(6인)	
여성·권익분과 (5명)	각 국 법안담당 총괄 사무관(2명)	각 국 추천 외부 전문가(3명)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가족·청소년분과 (5명)	"	"	청소년정책관실 가족정책관실

- 규제비용관리제 개념 및 사례분석 교육(KIPA)
-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16.2.22)으로 규제비용 검증대상에 폐지·완화 비용분석 추가, 비용분석TF 구성 등 규정

## 특허청

- 비용분석 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자 교육
- KDI 규제연구센터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2명 및 내부 법령 담당자로 구성된 규제비용분석 TF 운영으로 자체 검증 실시

## 환경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원(경제학 박사)을 비용편익분석 자문단으로 활용
  -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신속·정확한 비용분석 및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계약 추진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편익분석 연구용역을 진행('16.3월~12월), 참고사례 및 시스템 내뉴얼 등 부내 배포

## 다. 상시적 규제 폐지·완화 동기 부여

- ◆ 규제의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의 상쇄를 위해 부처가 자발적으로 폐지·완화할 규제를 모색·발굴토록 유인 제공

## 교육부

- 부서별 규제비용관리로 국민 부담에 대한 책임의식 확보
  - 규제비용관리 실적을 부서업무평가에 반영

## 국민안전처

- “2016년 국민안전처 규제정비 전략방안” 정책연구용역 실시
  - 국민안전처 규제 특성에 맞는 규제정비체계 구축

### Ⅲ. 향후계획

- ◆ 사업활동 부담 경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
- ◆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제도 보완·관리

#### □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시행

- 규제연구센터의 신설·강화규제 전수 사전검토로 비용관리제 대상판정시 기준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및 전문성 보강
- 비용상 중요규제만을 대상으로 비용전문위원회의 비용적정성 심의를 실시하여 비용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부처 부담 경감

#### □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공무원 대상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 시간 확대  
\* 5급·7급 공채 등 대상 규제영향분석교육 신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부처 관계자 이해 제고를 위한 비용분석 사례집 및 비용분석 매뉴얼 제공

#### □ 정부규제개혁평가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배점 상향 검토

- 제도운영을 위한 자체개선사항 등에 대한 가점부여 등